

“핵심 소재·부품·장비개발 年 1조원 지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일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 대비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논의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첫 회의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등)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움직임에 대해선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해 총력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전기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

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에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쟁력,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에서 특정국가 의존을 해소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

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당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없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감성적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돼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北 미사일 발사 우려엔 한목소리…대응엔 입장차

여 “위협 행위 중단하라”…한국당 “외교안보라인 교체”

여야는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열네살인 31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했지만 향후 대응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핵 억지력 강화를 주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에 전연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행위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중전이라는 단일한 인식에서 이제 헤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일 갈등 보고서 유출 유감” 민주연구원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31일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출된 데 대해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당내 의원들에게 발송한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연구원 뿐만 아니라 총선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작성하는데 신중해 달라”며 경각심을 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 ‘징계戰’ 확산

당권파 vs 비당권파 ‘징계 요구서’ 무더기 제출

바른미래당의 극한 계파 갈등이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戰’으로 치달고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물으며 ‘징계 요구서’를 무더기 제출했기 때문이다.

순학규 대표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이해훈 의원은 혁신위 운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의 비당권파의 ‘윤리위 충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순 대표는 윤리위원 일부를 교체, 비당권파가 즉각 반발하면서 갈등은 증폭

되는 양상이다.

순 대표는 31일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윤리위원(위원장 포함) 9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명의 윤리위원을 새롭게 임명했다. 당권파 측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윤리위원들이 있어 교체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비당권파는 순 대표의 입김을 받은 윤리위가 정파적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며 발끈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장병완 평화당 의원 ‘대한민국 의정 대상’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구갑) 국회의원이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심사해 그중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를 보인 의원들에게 시상해 왔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부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 의원은 갑을관계 분장 해결방안,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5.18역사



왜곡 방지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 등의 현안을 토론회와 법안발의, 상임위 질의 등 통해 제기하고 해결해 왔다. 특히 ‘광융합산업 발전법’ 등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동철, 광산구 소촌건널목 공사 갈등 합의안 도출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산 갑)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광산구 소촌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합의안을 도출하고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촌 건널목 입체화 공사는 건널목 진출입부의 경사도 문제와 소방차 진출입 문제, 전기·배수 시설물 관리 등 위치 문제, 좁은 인도 등 다양한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세 차례 간



담화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광주시와 철도시설공단, 광산구청과 대책마련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29일 합의안을 도출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합의안은 경사 완화, 미끄럼 방지 대책, 소방차 진출입 우회도로 개통, 인도와 노폭 확보 등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경진 ‘피해자에 성범죄자 등록정보 안내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 갑) 의원은 31일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장 등에게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게는 등록정보가 따로 고지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



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지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임야
삽니다. 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다스코이주

세라코이주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해 발주신 분
 - 대형 EPC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망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망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망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A~Z, 토목·건축·개발부터 EPC, O&M까지
문의처: 담당자 02340-7940, jkang@dae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회 순
	신재생에너지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 태양광영업 경력자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공학석)	
세 라 코	수질관리	설계영업	나 주
	세라믹 (정보기술)	설계영업	
	R&D	·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영역: 담당자 02340-2327, ncho@daesco.kr,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